



오색빛깔 차려입은 백양사 애기단풍

가는 가을이 아쉬운 듯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린 2일 장성 백양사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이 고운 빛깔로 물든 단풍나무 길을 산책하며 만추(晩秋)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세월호 참사 진실 떠오를까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진상규명위원장 유족이 추천

### 해경 해체 국민안전처로 통합

여야가 지난 31일 ‘세월호 3법’ 불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째에 진상 조사와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으며 여야는 세월호 3법을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위는 참사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들어가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물건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유족 측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실지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야당과 유족 측 요구대로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검 선정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야당 내에 유족 대표와 유족 대리인까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 야당 몫 조사위원, 특검후보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각 5명씩을 추천해 국회가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상임위원 1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바뀌게 됐다.

여야는 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게 했고, 과세·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과 압수 수색·검증 영장 도입 등 숨겨놓은 재산의 추적 수단을 강화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视界 제로’ 혼돈의 광주·전남 정치권

〈시계〉

‘카오스’ 선거구 재 획정에 지역구 지각변동 예고  
‘블랙홀’ 개헌 현실화 땀 모든 정치이슈 빨아들여  
‘빅 뱅’ 全大 경선을 싸고 계파 갈등 폭발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대 1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계 제로’의 혼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선거법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의 개헌 특위 구성도 급류를 타고 있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혁신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어 중진을 중심으로 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일 지역 정치권은 현재 결정에 따른 후폭풍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조정 대상에 포함된 지역구를 중심으로 분할과 통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주말 연휴 동안, 지역구를 돌며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차기 총선 직전이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전남에서 한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타 지역과 합쳐 새로 생

길 경우, 전남의 지역구 지도는 다시 그릴 수밖에 없다”며 “차기 총선에서의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지역 정치권의 설왕설래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요구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당장, 새정치연합 지도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박지원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석패율제, 동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등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선거구제가 폐지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의 지역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서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연내 개헌 특위 구성에 나서는 등 개헌의 흐름도 주목된다. 개헌이 현실화 된다면 소선거구 폐지 등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부속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혁신 경쟁도 변수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혁신’ 공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 등에서는 호남 정치권의 무기력한 현실에 대한 ‘중진 책임론’과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일부 초선 의원들의 교체론이 비등하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정당대회도 지역 정치권에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지도부 경선 물등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서는 ‘신당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친노(친 노무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정권 창출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열의 프레임은 극복할 수 있는 명분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60주년 기념 대음악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1월 6일 저녁 7시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학교 062)605-1130

##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피해자 전원 구제

1만8884명 추가합격 여부

12월 19일까지 결정·통보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문항의 오답자는 1만8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정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입에서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 된다.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구제 가능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상가투자의 정석**  
**도점적 단지내상가를 주목하라!**

**신창 대광로제비앙 단지배치도**

**입찰자 대상 경품행사**  
1등: 샤넬백 1명  
2, 3등: 백화점 상품권

**단지내 상가 공개입찰 안내**

**신창 대광로제비앙**  
**단지내상가**

구분	접수	입찰 및 개찰	계약
일정	2014년 11월 4일(화) 13:00~15:00	2014년 11월 4일(화) 15:00~15:30	2014년 11월 5일(수) 10:30~16:30

입찰장소 | 대광로제비앙 주택전시관 (서구 마곡동 162-5번지) 상무역 1번출구

문의 062) **363-5800**

시행사 금과은(주) 시공사 (주)대광건설